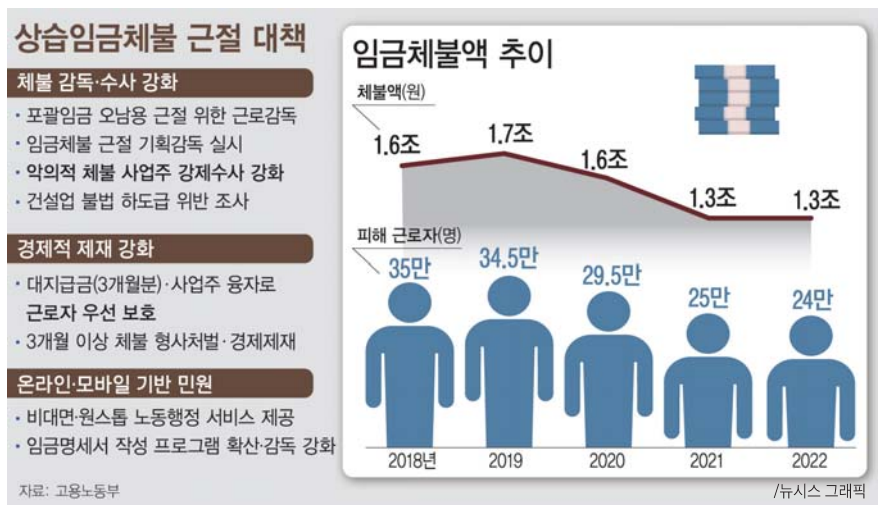
임금 3개월 체불 사업주 '돈줄' 막는다… 구속 등 강제수사도

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매년 임금체불 1.3조 이상 지속돼
근로자 24만명, 가족들 '생계위협'

총액 3000만원 사업주 '상습체불'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등 나서
재산은닉·출석거부땐 '강제수사'



/뉴시스 그래픽

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로 판단, 대출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이 지속되면서 약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임금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1년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면서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또 고용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서 청년층에서 제기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6일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근로 800개소 감독계획을 발표했고, 17일엔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중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친환경차·조선 등 기업 53곳 3년간 1.4조 '탄소중립' 실천

산업부, 탄소중립 융자사업 마감
융자·이차보전 등 총 7585억 신청
올 융자사업 지원경쟁률 13.5대1

친환경 자동차와 자원순환 분야 등 53개 기업이 3년간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자원순환을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저장, 조선 등 다양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달 28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53개 기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융자 7303억원,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액 보전) 282억원 지원을 신청했다.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년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사업의 지원 경쟁률은 신청금액 기준으로 융자는 13.5대 1, 이차보전은 3.5대 1로 나타나, 융자지원만 공모했던 전년도 경쟁률(4.9대 1)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의 탄소중립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 산업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선도프로젝트 분야에 지속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은 86.8%(46개사), 투자 규모는 69.5%(9656억원)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전년 대비 참여수는 2배, 투자 규모는 5배 증가했다.

탄소 저감 프로젝트 유형별로는 자원순환과 건물(기타) 분야 신청수요가 각 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제로에너지건물 분야가 각 4건, 이산화탄소 포집,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각 3건, 철강, 석유화학,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정유, 에너지 저장, 자동차, 조선 분야가 각 2건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세종=한용수 기자